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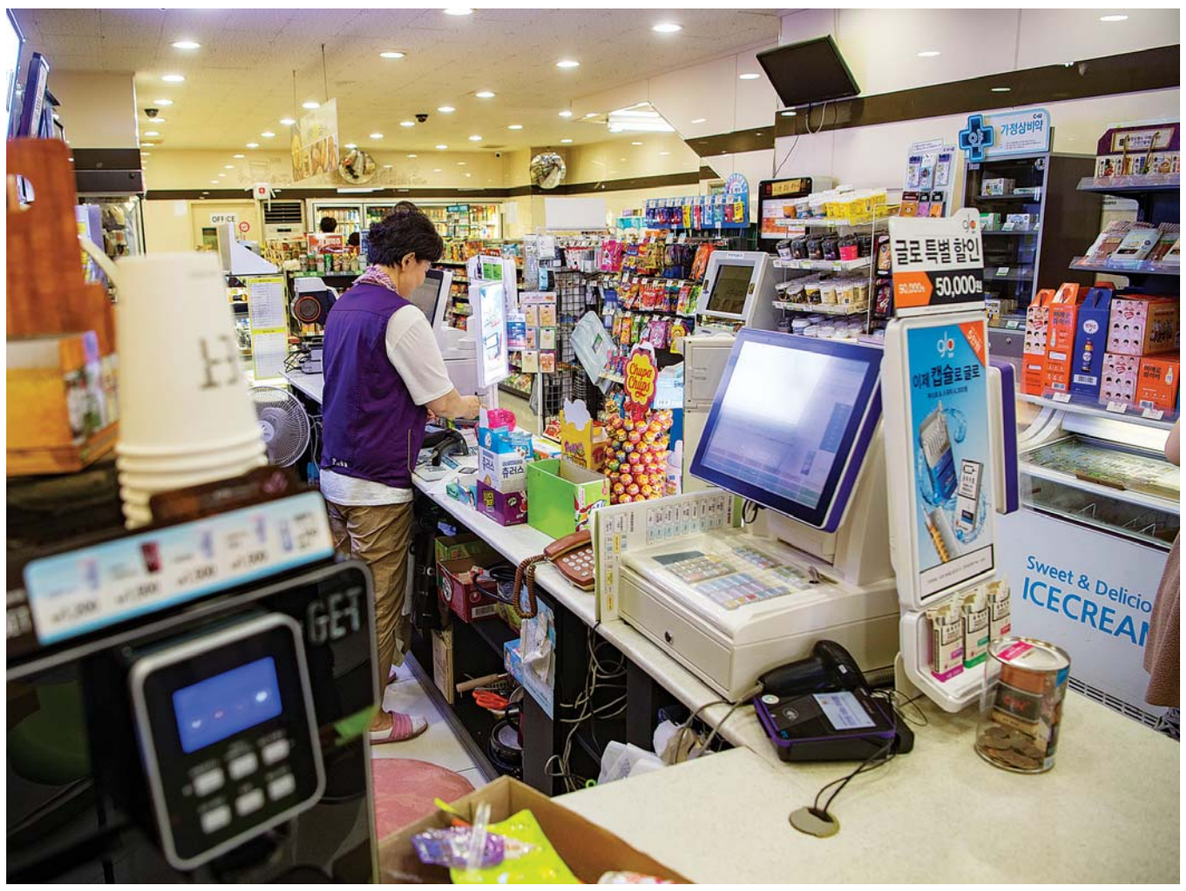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96호 1판 (음력 6월 6일)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乙들의 전쟁' 中쇼·영세상인은 울고 싶다

근접 출점 행위·천정부지 임대료·높은 카드수수료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사업 존폐 기로
결국 물가 인상 이어지고
인력난 더욱 부추길 우려도
정치권, 대책마련 힘 모아야



차라리 나홀로 근무 광주 동구 금남로 한 편의점 점주가 매장을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는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대신 직접 매장에 나와 일을 하는 사업주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지역 영세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자 "임대료나 가맹점 규정 등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만 올라 숨통을 조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 간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종류의 점포를 내고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근접 출점 행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임대료 문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카드수수료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광주시 동구 상인회 관계자는 "불과 1년 만에 최저임금이 29.1%나 올랐다"며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임대료는 내릴 생각도 않고 매출은 매년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임금을 30% 가까이 올려준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주변 옷가게도 이어지는 불경기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임금이 오르면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시 동구 옷가게 사업자는 729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과 비교하면 5.32%가 감소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출금리까지 줄줄이 오르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영세기업이 '사업 존폐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줄곧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 아무런 대안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의 최전선'라 불리는 외식업계와 편의점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도 지역 외식업계가 원재료 값과 임대료 상승세 속에 매년 인건비까지 대폭 오르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지역 외식업계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추세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결국 음식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편의점업계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상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가맹점 본사 로열티나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만 지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억제 제도 등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최저임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공론 방식 이달말까지 결정한다

광주시가 이달 말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여부에 관한 공론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16년간 반복되는 논의 속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만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시장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지난 16년 동안 논의해온 것으로, 공론과 합의의 틀을 잘 조화시켜서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심도 방식의 2호선의 건설에 반대하며,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또는 노면전차(Tram)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16일 공론 방식을 제안한 지 하룻만에 이 시장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시장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관련 부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 행위는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행정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16년간 반복된 논의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시정에 대한 시민 불신과 지역 내 갈등만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대표성을 지닌 각계 인물로 구성한 시민숙의 조사위원회가 나이, 성별, 권역별 무작위 표본추출로 25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분임토의·종합토론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16년간의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지가 불투명한데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5개월이 소요되면서 연말까지 지역 내 마찰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공론이라는 명분과 절차를 내세워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배제하고, 특정 의견을 관철시키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시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도시철도 운영 적자 문제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靑 "계엄령 문건,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심각성 인식"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지난 6월 28일 문건을 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단순히 문건뿐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며 "문건을 봤다고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6월 28일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건을 보고받은 참모진들은 사안의 엄중함에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전까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번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점점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건이 언급됐을 때에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4월 30일 보고 받았을 때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3일 '언론 보도 전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조 수석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조 수석이 구체적으로 언제 보고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측에서 청와대 정책실과 안보실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한 것과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3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허석 순천시장 민선 7기 구상
-모든 시민이 행복한 순천 꿈꾼다 ▶11면
후반기 반전 노리는 KIA
-팻딘 불펜으로 보직 변경 승부수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